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6년 2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포스코, 투명 경영 추진..청탁 내용 보고 시스템 가동
- 서울시 SH공사, 준법지원 기능 강화
- 황교안 총리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 가동"
- '클린 코리아' 아직 멀었다...부패인식지수 여전히 OECD 최하위권
-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공무원 부정부패 단호하게 척결"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제약 업계의 협회를 통한 공동의 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3. 청렴 위반 사례

-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 시간외수당 부당각출 지시

4. 지식마당

- 영국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 표준 (BS 10500)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포스코, 투명 경영 추진..청탁 내용 보고 시스템 가동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1일부터 ‘클린 포스코 시스템’을 가동,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추천이나 청탁을 가감 없이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천 및 청탁을 요청 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 받은 실무자 등 청탁 경로에 있는 모든 임직원은 관련 내용을 24시간 내에 클린 포스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22049§ion=sc3

2. 서울시 SH공사, 준법지원 기능 강화

서울시 SH공사는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에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또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계약서, 공고문 등의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며, 사업추진 시 관련 법률을 사전 검토해 위법요소를 제거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31&newsid=02227126612515096&DCD=A00403&OutLnkChk=Y>

3. 황교안 총리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대형 국책(國策)사업, 방위(防衛)사업 등과 관련한 부정부패와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事前)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새로운 부패 척결 방식으로 올해부터 16개 분야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정부는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 5조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패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부정비리 사후적발과 처벌 강화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2/2016011201070.html

최근 동향 및 소식

4. '클린 코리아' 아직 멀었다...부패 인식지수 여전히 OECD 최하위권

매년 반복되는 법질서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이란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보다 1점 높아진 56점을 받았다(100점 만점). 지난 2008년 5.6점(당시 10점 만점)을 받았던 이후 7년 연속 점수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공동 2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국가	전체 순위	OECD 순위	2015 CPI
덴마크	1	1	91
핀란드	2	2	90
스웨덴	3	3	89
...
대한민국	37위	27위	5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27000171>

5.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공무원 부정 부패 단호하게 척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 크레믈린에서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창설된 부패방지위원회는 문과위원과 상임위원으로 분류되며, 상임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 대통령 행정실장은 최근 경제악화 등으로 어수선한 내부를 다잡기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주제로 지난주 러시아 남부지구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날 엘비라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하여 직접 보고를 받는 등 각 부처별로 작성한 차제 내부기강 확립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601271503396743893_1/article.html

윤리경영 실천 사례

제약 업계의 협회를 통한 공동의 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제약 리베이트의 경우 제약 기업이 다 함께 리베이트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한 기업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할 경우 다른 기업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협회차원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리강령과 헌장을 제정하여 기업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부당 거래를 추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을 자율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윤리경영 자율진단 지표는 기업 내에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를 기업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구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윤리경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사내 윤리경영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1] 제약업계 윤리경영 아카데미

한국제약협회가 한국다국적의약품협회(KRPIA)와 손잡고 2015년 5월 22일 '제1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무정책 동향' 발표와 다양한 사례연구, 사례별 투표, 모의재판 등으로 구성됐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이번 윤리경영 아카데미가 국내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고, 보완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등 실효성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협회는 2015년 11월 23일 '제2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으며, ▲제약산업의 인사·노무 이슈 ▲제3자를 통한 영업활동 ▲환자 및 환자단체와의 교류 등에 대한 법적 기준과 사례연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례2]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가 처음 실시됐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불법 리베이트에 적극 대응하고 윤리경영을 더욱 확산/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되었다.

제약협회는 이사회에서 대리 출석을 포함한 48곳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첫번째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전체 제약기업 중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1개 이상 3개 이하의 제약사를 기술한 후 밀봉된 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서 가장 많이 거명된 제약사 3곳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협회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와 책임관리를 위해 업체들의 답변 내용 및 설문 결과에 대한 정보접근 권한을 한국제약협회 회장으로 국한하여 내용 확인 후 모든 사항을 즉시 파기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5-9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_cd=1015112400028

청렴 위반 사례

1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모 중앙행정기관 기관장은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결혼식 알림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청사 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여 10만원 ~ 50만원까지 합계 7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음

시사점 : 직무관련자와의 간담회에서 경조사를 고지하거나 청사 현관 출입구에 자신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행위와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위반임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시간외수당 부당각출 지시

모 농업기술센터 A소장은 예산담당자B 등 부하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후 1인당 매월 1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각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약 1천3백만 원을 기관운영과 대내·외 활동비로 집행함. 예산담당자 B는 사유를 소명하고 A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함에도, 오히려 각 과 서무직원 등에게 메일로 각출을 독려함

시사점 :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와 그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이 소명 등 없이 오히려 독려한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반임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지식마당

영국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 표준 (BS 10500)

2014년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뇌물이 전체 사업비의 10%까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진국 위주로 부패방지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있으며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The Bribery Act)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는 2005년 시행된 부패방지법과 2015년 3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각 국의 부패방지관련 법안은 뇌물 수수 관련한 징계 및 벌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면책조항 또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김영란법’의 제24조(양벌규정)에는 법에 저촉되는 부패 행위의 행위자는 물론 그가 소속된 법인 및 단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나 단, 조직이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면책을 하는 단서 조항이 있다. 영국의 뇌물방지법(The Bribery Act)의 제7조에도 기업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관련 개인의 처벌과는 별개로 조직은 면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기업 및 단체가 자체적으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영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뇌물방지법 이행지침에서는 뇌물제공을 예방하기 위해 영리조직들이 따라야 할 6가지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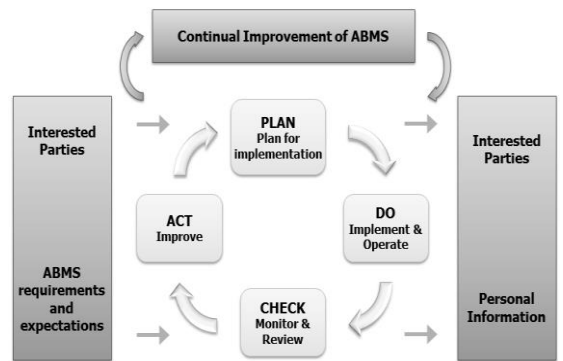
- 제1원칙 - 위험도에 비례하는 부패방지 절차 수립
- 제2원칙 - 최고경영진의 의지
- 제3원칙 - 위험성 평가

- 제4원칙 - 선관주의 의무(Due diligence)
- 제5원칙 - 의사소통
- 제6원칙 - 모니터링 및 검토

이에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ion)는 조직이 효과적으로 뇌물을 방지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함으로써 관련된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조직 운영의 모범 관행을 따를 수 있도록 BS 10500을 제정하였다.

BS 10500은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에 이르는 PDCA 모델에 따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이 실행되도록 한다.

<BS 10500의 ABMS와 PDCA 모델>



- ① 계획(Plan) 단계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뇌물방지 경영시스템의 계획을 위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 뇌물방지에 관한 방침의 제정, 실행을 위한 자원의 배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② 실행(Do) 단계는 뇌물방지를 위한 방침을 채택하고 경영시스템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뇌물방지 방침과 체계에 관한 내부 의사소통, 뇌물방지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담당자 책임 및 역할 분담, 위험성 평가, 신고 절차 마련, 그리고 조직 내·외부 업무 전반에 걸친 활동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식마당

- ③ 평가(Check) 단계에서는 일상 업무에 대한 뇌물 방지 준수 수준 검토와 함께 내부 심사 등의 활동을 통한 뇌물방지 수준 평가,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최고경영진 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④ 개선(Act)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변화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요구한다.

앞선 PDCA 모델에 근거하여 BS 10500은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측면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BS 10500 -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의 핵심 측면>

- 뇌물방지 정책(방침)
- 뇌물방지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조직 내 의사소통
- 교육, 훈련 및 안내
- 정책 및 시스템 실행을 위한 책임과 역할
- 뇌물방지경영시스템 실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 위험성 평가
- 실사(Due diligence)
- 채용 절차
- 선물, 접대, 기부 정책
- 급행료
- 의사결정 대리인
- 계약 내용 관리
- 재무적 통제
- 구매 조달 및 상업적 관계에서의 관리
- 문제 제기: 내부고발
- 조사 절차
- 징계 절차
- 내부 심사
-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국제표준화기구(ISO) 또한 반부패 경영 국제 표준 제정의 필요로 인해 BS 10500을 기본으로 하여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을 2016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ISO 37001이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거래와 공공·민간사업 수행 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자료 → 반부패정책>

BSI Korea

<http://www.bsigroup.com/ko-KR/>

Quiz

1.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가적 차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를 정부, 공공, 경제, 시민사회로 확장시키며 부패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하는 지수는 무엇 일까요?
 - ① 국가경쟁력지수
 - ② 부패인식지수
 - ③ 부패분석지수
 - ④ 국가부패지수

2. 다음 중 경조사 통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 ②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 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③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 ④ 부하 직원을 통해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3. 2016년 1월 현재까지 부패방지 관련하여 유일하게 제정된 표준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① ISO37001
 - ② BS7799
 - ③ ISO9001
 - ④ BS10500

4. 다음 중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 ②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 ③ 개발도상국으로의 ‘한국형 반부패제도의 수출’
 - ④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과월호 Quiz의 정답 및 해설은 다음호 부터 게재됩니다.

관련 행사

1.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처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8>

2. 감사원, 2016년 감사관계관 회의 개최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활동을 지원하고 중복감사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2016.1.29.금)



http://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2&mdex=bai9&nttlId=115431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